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5/ 29 통권 167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테러와 전쟁

주식 등 양도소득의 이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함
-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배분된 직무발 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임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 戰略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차액계산방법〉

개념, 유형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과세 제외
배당금	잉여금 배당, 분배금, 의제배당, 배당처분액, 펀드이익, 해외이익, 공동출자자분배금 등
감자차익 등	주식소각, 자본감소, 퇴사, 출자감소시 받는 금전 - 해당주식취득 사용실제금액
무상증자이익	법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하는 금액(제외 : 상법상 자본준비금(주발초 등)과 채평가적립금) 단 토지 재평가 차익 적립금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됨
해산분배이익	해산법인의 주주 등의 잔여재산 분배금전○해당주식의 투자원금 (단, 상법, 특별법, 기타법률상의 조직변경은 제외함)
합병소멸이익	합병소멸법인 주주 등의 금전가액○해당 소멸법인 주식취득원금
불균등증자이익	법인증자시 해당법인 외의 주주지분비율이 증가한 해당액
분할법인주주이익	분할시 취득하는 분할대가(주식가액 + 금전 +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 - 해당주식취득가액 등
배당소득총액가산	일반배당금액×11%(100분의 11)을 배당금액 가산하여 종소과세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77호 / 주간 22호

2024. 5. 29.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차액계산방법	표지
C E O 에 세 이	테러와 전쟁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중국 자회사 과실송금 시 발생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교육 제공시 계정처리 문의 - 변제기간이 종료 된 화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사항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8 9
직장인 Survival	행복의 여부는 자신이 결정한다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자경감면특례(조세특례제한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 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 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 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사전법규재산-511, 2023.10.24) - 세무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죄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사전법규재산-444, 2023.10.24)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1주택 재산세 감면, 올해도 유지...공시가격 급등해도 과세표준 제한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임	12
세 무 정 보	-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14 43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테러와 전쟁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이라크에 진출했던 가나무역의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정말 흑독했다. 2004년 6월 복면상태의 납치범들 세 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한국인의 애원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됐다. “나는 살고 싶다”고 한국 젊은이는 절규했다. 납치범 한 명이 아랍어로 말했다. “우리는 한국군이 이 땅에서 철군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인의 머리를 보낼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한국이 이라크에 대한 세 번째 최대 파병국이 되면서 한국은 이라크 내 무장단체의 주요 테러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라크에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는 오무전기 직원 피격 사건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의 한 간부와 무역업체 직원이 이라크 나시리야에서 민병대에 억류됐다가 14시간 만에 풀린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김선일씨 사건이 터졌다. 모든 한국인들이 진저리를 쳤다. 말 같지도 않은 무책임한 변명으로 어리버리하는 정부당국의 처신으로 더 큰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자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까맣게 잊혀진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간단치 않다.

21세기 벽두 2001년 9월11일 밝은 하늘. 세계 최강국 미국 심장부인 뉴욕의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타가 비행기테러에 여지없이 붕괴됐다. 할리우드 귀재들의 영화를 훨씬 능가한 장면이 연일 TV화면을 장식했다. 테러에 대한 분노에 앞서 기상천외한 광경에 세계인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양 날개를 벋어버린 채 후 단숨에 거대빌딩을 향해 돌진한 테러범들의 절묘한 비행술. 양 날개가 벋어버린 채 들이 받아야 빌딩은 상처 깊게 붕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슬로비디오처럼 황갈색으로 피어오르는 폭발연기와 함께 수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쌍둥이 빌딩. 그것은 미국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이슬람 세계에서 보면 9·11의 땃가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세계의 리더 미국 대통령 부시와 상당수 미국인들은 응징에 들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황무지 바위산에 최첨단 폭탄이 연일 용단폭격으로 가해졌다.

세계의 지성인 상당수는 선과 악이라는 미국식 이분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자업자득'론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노암 촘스키의 그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9·11테러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칸에 대한 전쟁이야말로 테러라고 비판한다.

1964년부터 8년 동안 한국은 베트남에 파병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월남파병이었다. 그런데 실상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외화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에 사용하려던 의도였다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이라크 파병 역시 국익에 따른 것임이 틀림없다.

특하면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북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등 전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다. 국가간의 이익과 이해관계와 분쟁 등 나름의 명분은 있으나 고통받는 것은 죄없는 민간인들일 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17일 (금)	5월 20일 (월)	5월 21일 (화)	5월 22일 (수)	5월 23일 (목)
미	달	러	(USD)	1349.40	1355.20	1356.20	1364.40	1363.10
일	본	엔	(JPY)	868.37	870.25	867.83	873.24	869.63
영	국	파	운 드	(GBP)	1709.76	1721.51	1723.80	1734.43
캐	나	다	달 러	(CAD)	991.00	995.81	995.52	1000.37
홍	콩	달	러	(HKD)	172.97	173.68	173.90	174.83
중	국	원	(CNH)	186.89	187.54	187.49	188.36	188.01
유	로	화	(EUR)	1466.46	1473.44	1472.97	1481.33	1475.69
호	주	달	러	(AUD)	901.33	907.37	904.72	909.78
싱	가	폴	달 러	(SGD)	1002.67	1007.43	1006.68	1012.6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8.15	289.11	289.48	290.76

중국 자회사 과실송금 시 발생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Q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 제18조의2)과 외국납부세액 공제(법인세 제57조)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국 자회사에 대한 과실송금 진행 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은 100분의 95까지 익금불산입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 때, 중국에서 원천징수 한 금액은 제18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해당되어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때의 수입배당금액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규정된 배당금이나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만 해당되는데, 과실송금금액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실 판단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외국법인세액인 경우 적용되는데 귀사가 국외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항목이 명확하지 않는데 외국법인세액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 제공시 계정처리 문의

Q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해외법인의 현지 채용인력 십 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당사 사업장에서 당사의 직원들이 제품생산, 품질관리, 시험장비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2.5개월 동안 실시 하였습니다.

이때 교육을 담당한 직원들의 임월에 교육시간을 적용하여 해당비용을 현지의 법인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 계정과목을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게 적합할런지 문의 드립니다.

1안 : 당사는 기술료 수입이라는 회계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로열티, 고객사로부터 받는 개발비용 등을 이 계정을 사용했는데, 금번 해당인력도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므로 기술료 수입(매출)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여부.

2안 :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제품생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

수하는 교육이라 영업 외 수입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A

일시적으로 발생된 교육제공용역에 따른 수입은 매출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제기간이 종료 된 회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Q

미수금이 크게 하나 있는데, 법원인가 회생채권이라 8년동안 변제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받은 바 없고, 관련된 회생인가 변제계획 관련된 서류만 있지 사실 회생채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 서류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해달라고 제안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몇억을 그냥 손놓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바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서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된건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인가결정 이후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미변제 되는건 귀속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대손처리는 신고사항인지 결산사항인지 애매하네요.

A

법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회수불능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처럼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변제계획이 있었는데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의견처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하고 아예 면책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회수노력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도 회수가 안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후 일반 채권처럼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도입 적용되었으며, 이번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업종	기준 수입금액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2 이상의 업종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로써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text{주업종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한,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

상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신고확인자 및 성실신고확인서의 내용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된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주요 사업 내역·수입금액 검토·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며,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확인의무 위반시의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사항

- 적용대상 업무용 승용차
아래 조건 제외 전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정원 9명 이상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 승용차(길이 3.6m·폭 1.6m 이하)

구분	보험		운행기록부	
	가입	미가입	작성	미작성
법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전액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사용비율 전액 비용 인정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대 : 전액 비용 인정 • 2대 : 업무사용 비율의 50% 인정 		

화

— ISA 만기 금액 포함 연금계좌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구분	내용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 + ISA 만기 자금(의무가입 기간 지난 해지환급금) 수령액
세액공제 한도	연간 900만원 + ISA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						
납부대상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금액 (과세표준)	• {(인별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 -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감면주택의 경우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에서 차감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단일세율 적용 법인은 0원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2.7%	0.5%		5%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25억원	1.3%	600만원		2.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00만원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0%	18,340만원	
	*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중부세령 § 4의4①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일반 누진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 개인은 150%,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무제한)						
	공시가격		개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포함)		법인		
	세부담상한 비율		150%		제한없음		
신고·납부 기간	• 12.1~12.15.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다만, 같은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합산배제 매입임대 주택	구분	임대기간	임대호수	공시가격			
	'18.4.2. 이전 등록	5년 이상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단기임대 합산배제 적용 제외, '18.9.14. 이후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신규 취득·매매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 매매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제외						
농어촌 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행복의 여부는 자신이 결정한다

우리는 엘리트 집단을 인생의 승리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패배자로 여긴다. 매사를 경쟁의 틀에 넣고 보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이 패배한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기 십상이다. 하지만 인생은 학력의 높고 낮음, 돈의 많고 적음, 외모의 좋고 나쁨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연봉이 낮아도, 애인이 없어도, 비정규직이어도 행복한 사람은 많다. 이런 조건은 승패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행복의 여부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타인이 정한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매사를 경쟁으로 보지 않으면 인생은 훨씬 즐거워진다.

항상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에게 지고 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라이벌이다'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타인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자신이 행복해지면 되므로 주변사람들은 라이벌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변사람들을 라이벌로 삼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 발전을 위한 좋은 방법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공연히 마음만 불편할 뿐이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변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상대를 라이벌로 여겨 괜히 마음 불편해하지 말고 의지하며 기대보자.

최 신 판 례 예 규

자경감면특례(조세특례제한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사전법규재산-511, 2023.10.24

Ⅰ 질 의

- (질의1) 조특령§66에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의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 동 규정 제5조제1항제1호(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대상자)의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동 규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령의 연령은 ① "연 나이" 또는 ② "만 나이"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Ⅰ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농산물직불제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 제5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농산물직불제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대상자 요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령"의 나이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거주자는 국내외 전소득과세)

서면국제세원-3210, 2023.05.31

Ⅰ 질 의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Ⅰ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사전법규재산-444, 2023.10.24

Ⅰ 질 의

- 위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명단공개 대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를

-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 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요청

○(질의)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

Ⅰ 회 신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회 신 기 획 재 정 부 조 세 정 책 과-1910(2023.9.19.)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

(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임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제과-715, 2023.08.09

Ⅰ 질 의

-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Ⅰ 회 신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주택 재산세 감면, 올해도 유지... 공시가격 급등해도 과세표준 제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가 앞서 시사한 대로 상대적 부유층에 혜택이 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와 더불어 즉시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공시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에 43~45%로 유지된다. 다주택자·법인인은 60%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경우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 105%보다 낮게 나올 경우 올해 과세표준으로 내면 된다는 뜻이다

복잡한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않으려면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자들이 실수한 사항을 모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3회차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안내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용은 조금 다른데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 "R&D 사업 검토기능 보강...예비 타당성 폐지" 부작용 방지"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토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날 정부가 예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 국세청 「주식과 세금 책자」中, 2024. 5

□ (발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하였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 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단계별 세금 현황 >

구분	무상이전(취득)	보유(배당)	유상이전(양도)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국외전출세

□ (주요내용)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하였으며,
-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

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안내 책자

제 1 절 주식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1 주식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주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보유할 때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의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유상	무상		유상	무상
과세여부	-	과세	과세	과세	-
세목	-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o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

제 2 절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2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금융투자업자입니다.

** 증여·상속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종류 및 구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일정한 증권예탁증권(DR)이 포함됩니다.

국내주식등 및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 출자지분의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출자지분은 주로 인적회사의 지분을 의미하며, 여기서 인적회사란 사원 상호간의 결합 관계가 깊고 회사의 활동이 사원들의 인적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로 사원들이 공동 출자하고 경영에도 참여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대표적인 인적회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비상장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외주식등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4)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란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부여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자금조달 방법에 따라 그 권리의 부여 형태가 상이합니다.

가) 신주인수권증서

유상증자 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로, 기존주주*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시 발행합니다.

*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상법 §418조①)

나) 신주인수권증권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증서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낮은 이자율을 대신하여 사채권과 별도로 채권자에게 발행합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 신주인수권증권이 부여된 사채로 채권과 신주인수증권의 분리가능 유무에 따라 분리형과 비(非)분리형으로 구분

5)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

기업이 국외자본 조달 목적 등으로 본래 주식인 원주(原株)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원



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하며, DR은 일반적으로 유통 활성화 목적으로 NYSE¹⁾, AMEX²⁾, NASDAQ³⁾, LSE⁴⁾, LuXSE⁵⁾ 등을 통해 상장거래됩니다.(장·내외 거래 모두 가능)

- 1) 뉴욕증권거래소, 2) 아메리칸증권거래소, 3) 미국장외주식시장, 4) 런던증권거래소, 5)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배당·증자 참여 등 주주권을 행사(DR에 배당금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소득 원천징수)하는 등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2011년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참고 DR예시

- ①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 : 미국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DR
- ②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 : 미국 및 유로시장에서 동시 발행되며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 하는 방식
- ③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 :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발행한 DR

4 양도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참고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개념

1. 매도 : 매매를 매도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63) 매매의 결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민법 §568)
2. 교환 : 민법상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민법의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567, §596, §597)
3.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부동산 등 금전 외의 양도 가능한 재산으로서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5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궁금해요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비율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들 중 최대인 경우 해당 주주를 말함

참고 연도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요약

보유 주식의 아래의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

구분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³⁾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3. 6. 30. 이전	3%	100억 원	5%	50억 원	-	-
'13. 7. 1. 이후 ¹⁾	2%	50억 원	4%	40억 원	4%	10억 원
'16. 4. 1. 이후 ²⁾	1%	25억 원	2%	20억 원	4%	10억 원
'18. 4. 1. 이후	1%	15억 원	2%	15억 원	4%	10억 원
'20. 4. 1. 이후	1%	10억 원	2%	10억 원	4%	10억 원
'24. 1. 1. 이후	1%	50억 원	2%	50억 원	4%	50억 원

- 1) '13. 7.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22)
- 2) '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1)
- 3) 코넥스 시장은 '13. 8. 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중 최대주주 판정 시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나, 대주주 중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참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	① 4촌이내 혈족 ② 3촌이내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⑤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경영 지배 관계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상기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특수관계 판단은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함(국기법 §2, 20호)

참고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친족관계

- ①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③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④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혈족의 범위

고조					6촌(중고조)
증조				5촌(중증조)	
조			4촌(중조)	6촌(재중조)	
부		3촌(백숙부)	5촌(중숙)		
본인	2촌	4촌(중형제)	6촌(제정형제)		
아들	3촌(질)	5촌(중질)			
손자	4촌(중손)	6촌(재중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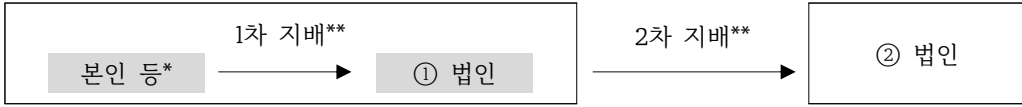
** 인척 :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에는 적용 배제

- ① 임원·사용인
- ② 본인의 금전이나
- ③ ①~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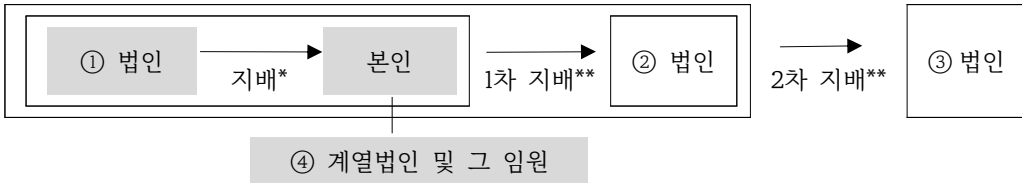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 등 : 본인,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자

** 지배 : i) 영리법인 : 30% 이상 출자 or 임원 임면권행사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ii) 비영리법인 : 이사의 과반수 차지 or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지배 : 직접 또는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1차·2차 지배 :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동일

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주주 판정기준일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되, 지분율 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기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분율 기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시가총액 기준

항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참고**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점**

2023. 8.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12월말 법인(사업연도 1.1.~12.31.)은 2022.12.31. 3월말 법인(사업연도 4. 1. ~ 3. 31.)은 2023. 3. 31.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휴일등으로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합니다.

8

상장주식을 연도 말에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나요?

주식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체결 시기와 매도대금을 수취하는 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실제 양도시기를 유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매도체결일부터 2일(휴일 제외)이 되는 날에 매도대금이 지급 되므로, 결제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참고**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사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 하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 ~ 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 28.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 29. 이후 잔고를 처분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2.12.27. 계약체결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됨

9

법인이 연도 중 신설되었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나요?

법인의 신설, 합병, 분할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신설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

10 기타 대주주 판정 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주식등을 대여한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 연도 중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등 대주주 판단시 유의사항

1) 주식등 대여 시 대주주 판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시 대주주 판단

거주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방법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판단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11

'23년 말에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3년 말에 상향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50억 원) 기준은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4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하여 '24년 8월 예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3. 12. 21. 배포)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 원 ▶ 50억 원)은 올해부터 적용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금년에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기준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금년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주주만 해당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소액주주(지분을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1.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참고 한국장외시장(K-OTC)과 코넥스(KONE×)시장 비교

구분	K-OTC 시장(Korea Over The Counter)	코넥스 시장(Korea New Exchange)				
개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 (자본시장법 §286, 시행령 §178)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②)				
		* 코넥스시장 주식의 세법상 취급				
		<table><tr><td>세법</td><td>과세취급</td></tr><tr><td>소득법</td><td>상장주식</td></tr><tr><td>상증법</td><td>비상장주식</td></tr></table>	세법	과세취급	소득법	상장주식
세법	과세취급					
소득법	상장주식					
상증법	비상장주식					

구분	K-OTC 시장(Korea Over The Counter)	코넥스 시장(Korea New E×change)						
개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 (자본시장법 §286, 시행령 §178)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②) * 코넥스시장 주식의 세법상 취급 <table><tr><td>세법</td><td>과세취급</td></tr><tr><td>소득법</td><td>상장주식</td></tr><tr><td>상증법</td><td>비상장주식</td></tr></table>	세법	과세취급	소득법	상장주식	상증법	비상장주식
세법	과세취급							
소득법	상장주식							
상증법	비상장주식							
성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근거를 통한 조직화·제도화된 장외시장● 비신청지정제도 도입<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등 편입● 투자편의성 및 결제안정성 제공<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 요건도 최소화●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 허용(모험자본의 선순환 지원)● M&A의 지원 및 합병요건 완화						
운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 : 등록 또는 지정● 퇴출 : 최종부도, 피흡수 합병, 불성실공시, 정규시장 상장 등● 공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법인) 정기(결산감사, 반기 검토) 및 수시 공시(주요경영사항 17가지)- (지정법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 : 주권양도 제한 없을 것, 감사의견 적정통, 일규격증권발행, 지정 자문인 1사와 선임 계약체결 등● 퇴출 : 감사의견거절, 공시서류 미제출, 기업설명회 미개최, 부도 해산 등● 공시 :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 보고서, 기업 IR개최(연2회)등						
현황	'23. 2. 현재 149개 법인, 149개 종목	'23. 2. 현재 134개 법인, 134개 종목						

제 4 절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13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비상장주식등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3. 12. 21. 배포)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과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14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해외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ETF(Exchange Traded Fund)의 개념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

* 인덱스펀드 : 일반 주식형 펀드와 달리 KOSPI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된 펀드

15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국내주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도 국내주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0 ~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20%(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정신고 의무없이 확정신고 의무만 부담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분	내용
과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1)(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스피(1%·50억 원 이상²⁾), 코스닥(2%·50억 원 이상²⁾), 코넥스(4%·50억 원 이상²⁾) 2)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소득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주식		
	중소기업	구분	세율
		소액주주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주식 :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국외주식 :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16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소득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제 5 절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17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주식등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 양도 및 취득시기

주식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일반적인 거래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합니다.(대법원2013두2034, 2014. 6. 12.)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다. 특수한 거래

1) 수 개의 자산 중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수 개의 자산 중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이 됩니다.

3)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낙찰받은 자가 매각조건에 따라 경·공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라. 취득시기의 의제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은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됩니다.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종류

- ④ (특정주식)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그 법인이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비중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사업으로서 일정 시설(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제 6 절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계산

18 주식등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등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가. 주식등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주식등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1)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1인당 250만 원 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2)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납부할세액 계산

3) 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 등 의무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되고, 총결정세액에서 기 예정 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세액이 됩니다.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세율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 ~ 25%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20 ~ 25%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30%
국외주식등**			20%

* 과세표준 3억 원 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의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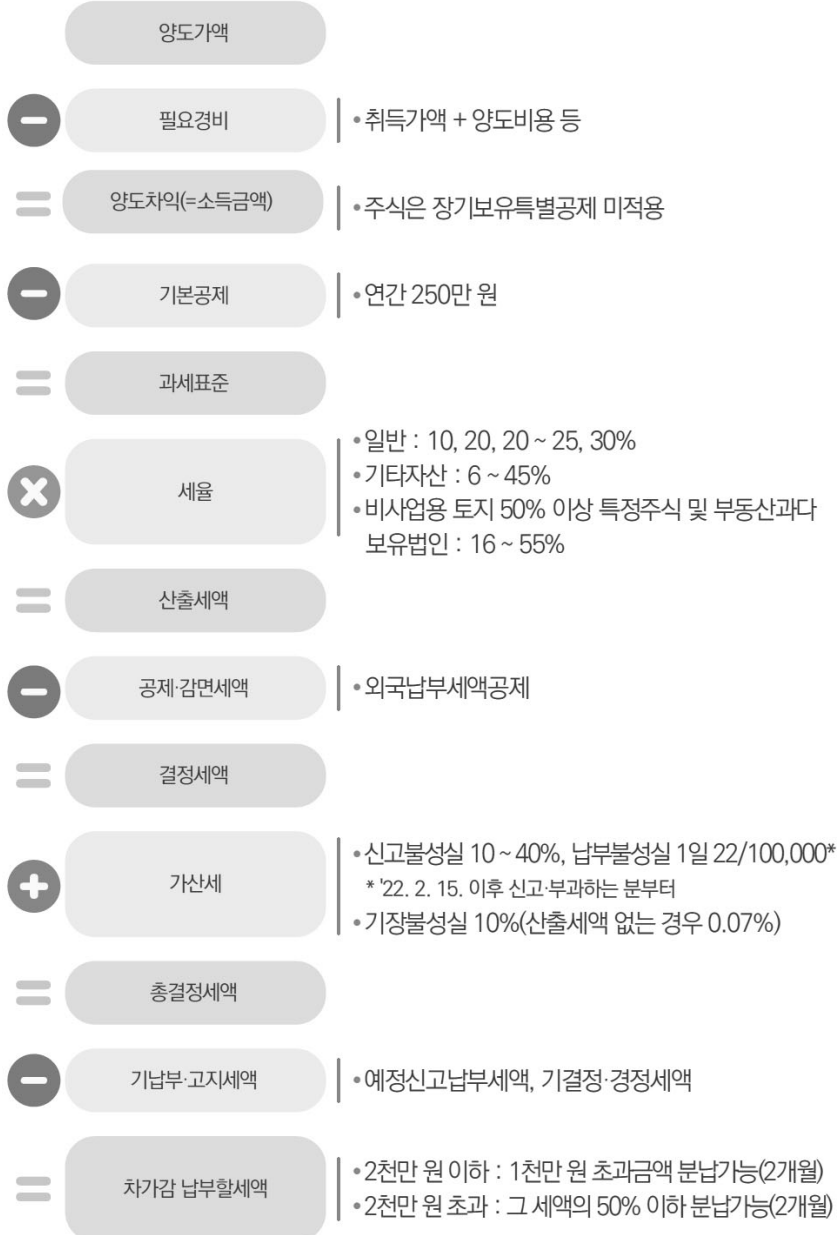
참고 국내주식 합산신고 적용사례 (단위 : 천원)

- ▶ '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24. 5.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5월(일반법인 대주주)	8월(일반법인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 - 누진공제	20% - 0	20% - 0	25%* - 15,000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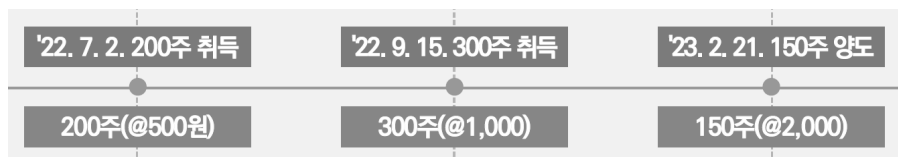
19

수차례에 걸쳐 다른 가격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계산사례

- ▶ '22. 7. 2. 및 '22. 9. 15. 취득한 500주 가운데 '23. 2. 21. 150주(@2,000원)를 양도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 양도가액
 $150\text{주} \times 2,000\text{원} = 300,000\text{원}$
- 취득가액
 $150\text{주} \times 500\text{원} = 75,000\text{원}$
- 양도차익
 $300,000\text{원} - 75,000\text{원} = 225,000\text{원}$

20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해당연도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 등(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및 기타자산), 주식등(상장·비상장·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1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건가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두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참고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사례

- ▶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4. 5. 확정 신고·납부하는 경우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 - 누진공제	25% - 15,000	25% - 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참고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시 양도자산 구분 및 사례

양도자산 구분		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 (소득법 §103)	부동산(특정주식등 포함)	10,000,000	2,500,000
	주식등(국외주식 포함)	10,000,000	2,500,000
	파생상품	10,000,000	2,500,000
	신탁수익권	10,000,000	2,500,000
국외 (소득법 §118의7)	부동산(특정주식등 포함)	10,000,000	2,500,000
합계		50,000,000	12,500,000



22

여러 주식종목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혼재된 경우 이를 통산할 수 있나요?

여러 종목의 주식을 거래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섞여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만 가능합니다.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익도 통산할 수 있으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식거래 유형별 손익통산 가능 여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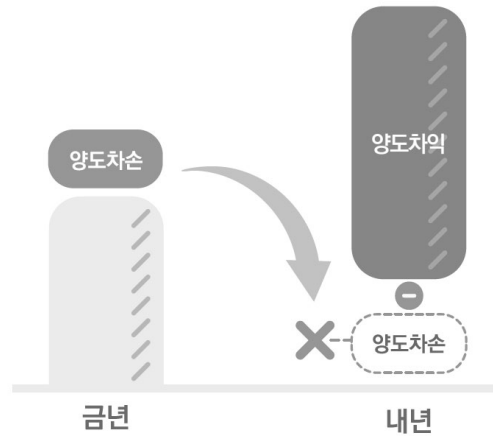
과세대상 주식 간 손익통산만 가능				국내주식				국내주식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대주주	소액주주			
					장내	장외		
국내주식	상장주식	대주주		○	×	○	○	○
		소액주주	장내거래	×	×	×	×	×
			장외거래	○	×	○	○	○
		비상장주식			○	×	○	○
국외주식				○	×	○	○	○

*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 불가

23

금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 후 양도차손액은 내년에 이월하여 내년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국내주식은 이익이 발생했는데 미국주식은 손실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24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미국주식의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요?

국외주식의 경우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의 통산만 가능

참고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적용사례

- ▶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4.5월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손실금액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 (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단위 :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제 7 절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

25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로서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가 달라져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 ~ 5. 31.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대상

구분	상장법인인 주주		비상장법인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	○	○	○
소액주주	X	○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X	○

참고 주식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구분	예정신고기한	사례(양도일: '24. 2. 1.)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4. 8. 31.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4. 4.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예정신고의무 면제 (확정신고 대상)	- ('25. 5.3 1.)

26 홈택스 등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도움자료 등을 이용해 예정신고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 홈택스 등을 이용한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요령**1) 맞춤형 도움자료**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간편신고 서비스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 시간

신고는 매일 06:00 ~ 24:00, 납부는 07:00 ~ 23:30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방법 안내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구분	주요 내용
홈택스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작성' 선택 ● 이용 시간 : 매일 06:00 ~ 24:00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 「아이폰 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후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앱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 매일 06:00 ~ 24:00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우편신고·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분	주요 내용
홈택스· 손택스 PC·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선택 ※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 '납부 고지·환급'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 *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수납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2.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1.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유의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김국세씨는 '23년에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당)의 경우 '23. 12. 25. 현재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국내주식 손실을 미실현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500,000원

●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 2,500,000원} × 20% = 19,500,000원



2.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한 경우('23. 12. 25. 국내 B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① ± ② = 0원

① 국외주식 양도차익 100,000,000원

② 국내주식 양도차손 △100,000,000원

*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2.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김국세씨가 '20. 4. 1.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C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23. 12. 25. 현재 주가가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 $\{(600,000,000\text{원} - 100,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times 20\% = 99,500,000\text{원}$

2.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 ① ± ② = 0원

※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증여세

$600,000,000\text{원}(\text{증여재산가액}) - 600,000,000\text{원} * (\text{증여재산공제}) = 0\text{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6억 원

② 양도세

$600,000,000\text{원}(\text{양도가액}) - 600,000,000\text{원} * (\text{취득가액}) = 0\text{원}$

*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시 증여재산가액임

3.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몇 년 동안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김국세씨는 '23. 4. 1. 미국 A상장주식 1,000주를 10,000원에 취득. '23. 12. 25. 현재 A상장주식은 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김국세씨는 주식 양도를 계획중임.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1. 전부양도 : '23. 12. 25. 주당 15,000원에 전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 500,000원

● $\{(15,000,000\text{원} - 10,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times 20\% = 500,000\text{원}$

2. 분할양도 : '23. 12. 25. 50%, '24. 1. 1. 50%를 주당 15,000원에 분할 양도 시 양도소득세 : 0원

● ① ± ② = 0원

① '23.12.25. 양도분

$\{(7,500,000\text{원} - 5,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times 20\% = 0\text{원}$

② '24.1.1. 양도분

$\{(7,500,000\text{원} - 5,000,000\text{원}) - 2,500,000\text{원}\} \times 20\% = 0\text{원}$

4. '상장주식 증여' vs '주식취득자금 증여'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며, 상장주식의 시가는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등 증여 후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어려운 주식 증여보다 주식 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고려하세요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주식의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주식의 시가는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변경되므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증여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식 증여를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세요.

6. 비상장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체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고가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시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국세청, 2024. 5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 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 기존 1주택자가 '24.1.4.부터 3년간('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 특례 대상 지역 :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9억 이하 세율 인하($\Delta 0.05\%$ 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3.28일부터 2년간('25.12.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 빈집 정비 지원 >**

-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 재산세 합산방식: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 (당초) 30% → (개정) 5%

-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가 '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영 제2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조정 리츠(법인)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 ※ 법인 주택 취득세율: (현행) 중과세율12% → (개정) 일반세율1~3%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3.28.)
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	영 제101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묘지용 토지 인용 조문 정비 	
③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영 제102조 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12년)시 농협경제지주로 소유권이 이전된 목장용지 및 임야 분리과세 적용 → '89.12.31일 이전부터 농협중앙회가 소유하던 목장용지 및 임야에 한정 	
④ 빈집 정비 후 공용토지 세부담 완화	영 제103조의2, 제1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별도합산과세,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 적용 	
⑤ 철거·멸실된 건축물 부속토지	영 제10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 부속토지 별도합산 인정기준 보완 	

별도합산 인정기준 명확화		→ 건축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합산 제외 → 부속토지 범위* 마련 *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도지역별 배율 (3~7배)로 한정	
⑥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	영 제105조의3	○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대상 - 행안부장관이 제외·축소하는 경우 외 추가·확대하는 경우도 포함	
⑦ '24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 제1항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⑧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 신설	영 제109의2 규칙 별지서식 (제59호의3)	○ '24년부터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액* 산출 기준 마련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①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직전연도 공시가격 ×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과세표준상한율 = 5%	
⑨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영 제110의2 규칙 별지서식 (제58호의3)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신규 취득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에 1주택 특례* 유지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주택요건)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24.1.4일(정책발표일) ~ '26.12.31일까지 취득분 (단, 동일지역 추가 취득은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vs. 다주택 60%, '23년), 9억 이하 주택 세율 △ 0.05%p 등 ※ '24.4.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경제정책 방향 (1.4.)
⑩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식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64호의2)	○ 납세의무자, 위탁자로 구분된 서식에 수탁자를 추가하여 신탁관계에 따른 납세의무자 신고 시 혼란 방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금융위원회, 2024. 5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5.21. ~ 7.1.)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 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1Q) 2.4조원

따라서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붙임 참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①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②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연(공통출연)]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25.12.31일까지) 상향한다.

개정안은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24.3.27, 은행연합회 보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서민금융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출연(차등출연)]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 차등출연제도 개요 >

□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 중

※ 차등출연금 계산 : 신용보증잔액 × 차등출연요율(0.5%~1.5%)

□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

구분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율=대위변제금/금융회사 출연금)	차등출연요율
신용보증금액 에 따른 출연요율	150% 초과	연 1.50%
	100% 초과 ~ 150% 이하	연 1.25%
	100%	연 1.00%
	50% 이상 ~ 100% 미만	연 0.75%
	50% 미만	연 0.50%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액)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 25.12월까지)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5.21(화)부터 7.1(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 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5.21일(화) ~ 2024.7.1일(월), (41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doobong@korea.kr - 팩스 : 02-2100-262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안정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방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해 왔음
-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주요내용

-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정부·이용자 등 관련 주체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
 - 금융회사의 보증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 25.12월)
 - * 은행 0.03% → 0.035%(0.5bp ↑), 비은행 0.03% → 0.045%(1.5bp ↑)
 - 정부 재정의 서금원에 대한 추가 지원(' 25~' 26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후 결정 예정)
 -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이용자의 보증료율 한시 상향(~' 25.12월)
 - * 보증료율 인상 상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금원에서 추후 결정 예정

□ 향후계획

-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시행령 개정), 정부 재정 확보(재정당국 협의), 이용자 보증료율 상향(서금원 규정 개정) 등 차질없이 추진
- 이를 통해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

< 최근 3개년 정책서민금융공급 실적(단위 : 조원) >

연도	2021	2022	2023	2024.1분기
총 공급실적	8.7	9.8	10.6	2.4
- 서금원 공급	5.3	7.3	7.2	1.4
- 새희망홀씨 등 기타	3.4	2.5	3.4	1.0